

기조연설

“왜 친환경/유기농업을 하여야 하는가, 친환경/유기농업의 육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김 성 훈

중앙대학교 교수, 전국농민단체협의회 고문

지난 수십 년간, 본인은 이른바 한국의 “친환경농업” 즉 지속가능한 농업에 유기농업의 지도자로서, 소비자-농민이 함께 하는 협동조합 창립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의 최고 농업행정 담당자로서 여러모로 깊이 관여해 왔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친환경농업이 급속한 상업화, 지구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 온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물론, 그렇습니다”라는 것이다. 정부가 뚜렷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친환경/유기농업이 현대 식품산업과 농산업을 초래하는 세계적 병리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주목과 지원을 받을 만하다.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의 수와 지속가능한 농업에 사용되는 농지의 규모는 지난 수십년간 끊임없이, 하지만 아주 천천히 늘어나고 있다. 그럼으로써 사회와 환경에 대한 훌륭한 철학과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우선 토양과 자연의 능력을 보전하고, 현대 생명공학과 자연상의 천적의 도움을 받아 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 정부가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친환경농업 정책에 참여한 약 2만 명의 농가(총 농가의 1.6%)가 화학비료 사용량을 39% 줄였고, 농약사용 회수도 절반으로 (여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ha당 평균 쌀 수확량은 99% 수준(즉 4.92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밀농업”의 하나이며 종합방제양분관리체제(IPNM)에 기초한 한국형 지속가능한 농업은 현재까지는 기존의 생산성을 떨어트리지 않은 채 안정되고 높은 산출량을 이룩하는데 성공해 왔다. 그 결과, 높은 생산물 가격으로 4년 동안 평균 농업소득은 6.2% 늘어났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강인한 의지와 전념, 수많은 땀을 흘려야 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혜택은 말할 나위도 없이 안전한 먹거리, 질병관리, 환경보호의 형태로 대부분 소비자와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 그러한 효과에 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므로 새삼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친환경/유기농업이 앞으로 세계인구를 먹여 살리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주 충분히 그렇습니다.” OECD 회원국들의 성과를 보전대, 친환경농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기술적 진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도입한 초기 단계에서도 식품과 농산물의 전체 생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OECD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 대개 저개발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식품 생산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망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현재의 식품분배 체계로서는 지구상의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을 제거하기는 어렵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극빈 저개발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전 세계적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무역자유화가 친환경/유기농업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닙니다.” 적어도 농산물 수출국과 주요 초국적기업들이 자신의 집약적 생산과 무역 기업 행위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무역자유화 계획과 정책 안에 환경파괴로 인한 총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한,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은 사회에 다원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정부가 이것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함께 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무역자유화 문제의 차원을 벗어나서 저개발국의 식량안보 문제는 각 나라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친환경/유기농업의 어떠한 사회적 차원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게 대하여 중요한 것인가?

대부분 개발도상국의 비교적 소규모의 가족농들은 친환경농업의 소득 측면을 먼저 들여다 볼 것인 반면, 선진국의 소비자와 환경주의자들은 집약적 기업농 체제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과 편익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국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부가 필요한 기술과 자재의 공급, 직불제, 적절한 유통과 같은 여러 가지 유인정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는 1999년 이후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친환경농업을 주도하는 농업인들에게 화학비료와 농약을 각각 2004년까지 30, 40%까지 줄이도록 하는 직접(소득)지불제를 도입하였다. 또 다른 한편, 식량이 충분하고 수출하는 나라들은 건강, 삶, 환경적 고려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연결하여 좀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21세기 사상의 주된 흐름은 지구상에 지속가능한 사회를 다시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은 확실하다.

시장을 통해서 친환경/유기농업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보조 정책들이 필요할 것인가?

최근 일어난 광우병, 구제역, 식중독, 위해성 첨가제와 같은 재앙적 문제들을 야기한 집약적 화학제품 의존형 농업을 대신해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늘어나고 식품안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주목할 만하게 성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잡지인 "자연(NATURE)"은 2001년 4월 호에서, 순수한 유기농장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기까지는 평균 9년이 걸린다고 보도하였다. 그렇지만 친환경농업은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류가 선택해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가령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전자상거래와 같은 컴퓨터 발전으로부터의 적절한 도움을 통하여 시장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커 가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잘 지적했듯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양한 소규모 생산단위가 지식기반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안에서 비교적 쉽게 스스로의 시장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친환경농산물의 마케팅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정부의 인증, 보장체제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공인된 검증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노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업은 다가오는 지식기반의 시대, 지속가능성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 시대에서 고도로 집약적인 화학제품 의존적인 체제보다 더욱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국의 농업정책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WTO 각료급 회의와 같은 국제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인류의 삶과 행복, 평화 전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